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민중당		
정책순위: 1	노동법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정책분야	노동
<p>□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랜차이즈 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교섭력 확보 ○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 고용안전망 확충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더 나은 노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실업으로부터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초단시간노동자 주휴수당 보장(‘쪼개기 계약’ 규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폐지,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p>□ 이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 노동법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2.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저수익 보장, 가맹점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포함한 최저수익 보장 의무 및 단체교섭 의무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부과 3.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전면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고용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사업주의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여, 자영업자 당연 가입 및 보험료 지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고용보험으로 편입 ▷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 지급, 7년마다 90일씩 ‘재충전급여’지급(안식월), 청년이직준비급여(600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4. 실업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실업자가 수급 기간이 끝난 장기 실업자, 청년구직자에게 실업부조 지급 5.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발생사업장 직접고용 의무, 중대재해 처벌 강화, 산업안전분야부터 원청의 교섭의무 부과(‘공동사용자책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경영자 취업 제한, 폭염한파 등 재난 경보시 작업중지권 부여 <p>(계속)</p>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민중당		
정책순위: 1	노동법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계속)	정책분야	노동
<p>6. ‘공동사용자책임’ 도입으로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 교섭권 보장</p> <p>▷ 노동법의 ‘근로자’, ‘사용자’ 정의 규정을 바꿔 원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전속거래업체, 모회사 등에 단체교섭의무 등을 부과</p> <p>7. 노동조합할 권리 보장</p> <p>▷ 단체협약 효력 확장 및 실질적 교섭권 확보</p> <p>▷ 노조법상의 ‘지역적구속력’을 2/3에서 1/2로 하향하고, 노조법상의 ‘사용자단체’를 확대(각 지역 산업협회, 상공회, 프랜차이즈협회 등)</p> <p>▷ 교섭창구단일화 강제 제도 폐지, 산별교섭 제도화, 타임오프테 폐지, 손배가압류 제한</p> <p>8. ‘비정규직 임금 1.5배’</p> <p>▷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불안정고용수당’(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해 지급</p> <p>▷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파견제법·기간제법 폐지 및 사용사유 제한</p> <p>9. 심야노동 금지</p> <p>▷ 일부 사업장의 단협으로 적용되는 심야노동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심야노동 필수적 사업과 업무만 예외적으로 허용)</p> <p>10. 아프면 쉬어야 한다 - 상병휴가 및 휴직 제도 도입</p> <p>▷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유급휴가(현재는 일부 사업장만 단협으로) 보장(근로기준법 개정)</p> <p>11. 노동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및 노동법원 설립</p> <p>▷ 노동 사건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 일부 노동자가 승소하면 같은 처지의 노동자에게 소송결과를 모두 적용(도로공사, 현대차 하청 판결을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p> <p>▷ 노동 사건 특별법원인 노동법원 설립</p> <p><input type="checkbox"/> 이행기간</p> <p>○21대 국회 내</p> <p><input type="checkbox"/> 재원조달방안 등</p> <p>○ 해당 사항 없음(노동관계법 입법 사항)</p> <p>- 단 3항(노동보험)은 피보험자수 확대에 따른 보험료 수입</p>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민중당		
정책순위: 2	제목 : 농산물공정가격실현, 농민수당전면 시행	정책분야	농림해양수산
<p>□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재배 확대로 농산물 수급 및 농가소득 안정 ○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으로 농가소득 및 농민기본권 보장 ○ 중앙정부차원의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입법(농민수당법제정) ○ 농민수당 예산확보 <p>1.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겨울부터 주요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폭락 사태가 연이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경영이 위협받을 뿐 아니라 농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음 - 농산물 가격불안정 사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격정책 필요 ○ 농산물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바탕으로 농산물 가격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제도마련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가격안정은 농민의 생존권을 넘어 전 국민의 안정된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임. - 현재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약재배율 확대함. 식량자급률(사료용 포함) 23%대의 OECD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극복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여야함. <p>2. 농민수당 전면시행을 위한 농민수당 입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농민의길 그리고 민중당이 추진한 농민수당 운동이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지자체의 농민 수당 도입은 농업의 공익기능을 인정한 첫 번째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농민수당은 각계각층의 응원을 받으며 전국으로 확산됨. ○ 하지만 현재 도입되거나 추진중인 농민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울타리에 머물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 뿐 아니라 제도적 한계도 가짐. 이미 농민수당의 우수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증된 상황에서 현재의 농민수당 한계 극복과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함 <p>(계속)</p>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민중당		
정책순위: 2	제목 : 농산물공정가격실현, 농민수당전면 시행 (계속)	정책분야	농림해양수산
<div> <input type="checkbox"/> 이행방법 </div> <div> <p>1.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소가격안정제 예산 4,000억 원으로 확대 ○ 농협을 통한 주요농산물 계약재배율 50%로 확대 ○ 기초식량보장법 제정으로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부터 공공수급제 도입, 보리·밀 수매 확대 및 실시 ○ AMS(감축대상보조)를 전액 농산물 가격안정 예산으로 투입 <p>2. 농민수당 전면시행을 위한 농민수당 입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수당법 제정 - 농업경영체 등록제 대체하는 농민 등록제 도입 -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총 7조원 예산 확보 - 농민 수당 제도 운영에 농민 참여권 보장 - 어민 수당 법률 별도 추진 </div> <div> <input type="checkbox"/> 이행기간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내 </div> <div> <input type="checkbox"/> 재원조달방안 등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S(감축대상보조)를 전액 농산물 가격안정 예산으로 투입 ○ 농민수당법제정, 세구조정을 통한 소요재원 마련 </div>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민중당		
정책순위: 3	제목 : 투기꾼잡고, 집걱정 잡자!	정책분야	국토교통
<p>□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세임대료 상한제, 평생계약갱신청구권제, 공정임대료제도 도입 ○ 세입자 주거권 보장(주거비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 주택 부동산 투기 근절하고, 불로소득환수 <p>□ 이행방법</p> <p>1. 세입자 주거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임대료제도’, ‘임대료인상률상한제’, ‘평생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 “공정임대료제도” 도입, 주택공시가격처럼 전월세도 소득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기준가격을 결정 -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세입자에게 ‘평생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 민간임대주택 등록의무제 실시. ○ 주거비 지원 현실화 및 대상 확대 - 중위소득 45%이하 ‘월세 전액지원’ - 60%이하 저소득층과 청년까지 ‘월세부담 30%상한제로 주거비 지원’ 확대 ○ 공공임대주택 확대 - 재건축 공공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거주민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제도를 정비 -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의무할당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 LH 등 공공기관은 분양주택, 단기임대주택공급을 지양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에 주력 ○ 강제철거금지법 제정, 재건축사업에서 세입자 보상 및 임대주택 제공 의무화 <p>(계속)</p>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민중당		
정책순위: 3	제목 : 투기꾼잡고, 집걱정 잡자! (계속)	정책분야	국토교통
<p>2. 투기근절 불로소득 환수</p> <p>○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도입,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및 투기금지</p> <p>○ ‘주택거래허가제’, ‘다주택자주택담보대출 금지법’, ‘갭투기 금지’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주택자주택담보대출 금지법 제정 - 갭투기금지법으로 주택구입자금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투기제한지역에서는 0%, 비규제지역에서도 보증금비율이 주택구입자금의 50%이하로 규제 -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 투기지역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사재기를 제한, 실거주자라 하더라도 6개월 이내 기존주택 매각(미이행시-이행강제금 부과) /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임대용주택을 구입할 경우 갭투기금지 비율 등 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며, 10년 이상 세입자 거주권을 보장 <p>○ ‘토지초과이득세’, ‘다주택자 조세감면 전면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초과이득세를 지방세로 신설하여 불로소득을 환수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세금특혜제도 전면 폐지(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과 함께).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 공제, 보유세 감면 제도를 모두 폐지 <p>□ 이행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내 입법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임기내 법 제도 및 중장기 이행계획수립 등 이행기반 마련을 통해 단계적 이행 - 주택도시기금 민간사업자에 지원 제한(중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으로 사용) <p>□ 재원조달방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비지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외에는 법률 개정 사안으로 재원 불필요 ○ 주거비지원 및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초과이득세 신설, 세수조정을 통한 소요재원 마련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민중당		
정책순위: 4	제목 : 한반도 평화실현과 불평등한 한미 관계 청산	정책분야	통일외교통상
<p>□ 목 표</p> <p>○ 비정상적인 정전상태를 완전히 종식하고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던 냉전과 분단구조를 깨뜨 이 걷어냄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함.</p> <p>○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p> <p>○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한미 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 2020년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완료, 방위비 부담금 특별협정 폐기, 유엔사 해체</p> <p>□ 이행방법</p> <p>1.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p> <p>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한반도에는 평화를 향한 커다란 움직임이 준비되고 있음. 이제는 불신과 갈등으로 깊게 패인 상처를 치유하고 비정 상적인 정전상태를 완전히 종식하는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할 시점임.</p> <p>○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민중당 한반도 평화협정안 제출</p> <p>○ 역대 남북 합의서 및 공동선언 국회 비준</p> <p>2. 한미상호방위조약폐기</p> <p>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며,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그리고 그 법적 근거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주장하 고 있음. 즉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폐기되어야 함.</p> <p>○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p> <p>○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p> <p>(계속)</p>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민중당		
정책순위: 4	제목 : 한반도 평화실현과 불평등한 한미 관계 청산(계속)	정책분야	통일외교통상
<p>3.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해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이 중단 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지하고, 군사의 철군 및 기지의 철거가 동반됨을 의미함. -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이후 지금까지도 한반도에서는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와 기지 철거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한반도 평화협정체결과 평화체제는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정전상태에서 주둔했던 외국군대의 철수가 함께 이뤄져야 함. <p>○ 한미 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p> <p>○ 2020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p> <p>○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p> <p><input type="checkbox"/> 이행기간</p> <p>○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진행</p> <p>○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후 3년 이내</p> <p><input type="checkbox"/> 재원조달방안 등</p> <p>○ 재원 불필요</p>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민중당		
정책순위: 5	제목 : 국민을 위한 국회개혁, 국민의 직접정치 확대	정책분야	정치
<p>□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도입 ○ 비리, 막말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 ○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 자유로운 참정권 보장 - 청소년과 노동자 참정권 보장 - 교사공무원 정치, 정당활동 자유 보장 <p>□ 이행방법</p> <p>1. 국회의원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소환제법 제정 ○ 국민입법청구법제정, 국회법 개정 - 1단계 법률 제개정을 통해 국민입법제안 - 완전한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개헌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투표실시에 관한 법률 -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한, 조약 등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 - 국회 과반 찬성, 국민요구하는 경우 대통령이 국민투표실시를 결정하도록 함. - 국민투표법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 - 장기적으로 개헌을 통해 국민투표대상, 발의주체와 요건을 개선함 <p>2. 국회의원 특권폐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백지신탁제 강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입법 ○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 -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고, 국회의원 세비를 자기가 결정하는 △국회수당 구조개혁 <p>(계속)</p>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민중당		
정책순위: 5	제목 : 국민을 위한 국회개혁, 국민의 직접정치 확대(계속)	정책분야	정치
<p>3. 자유로운 참정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개정, 선거일 유급휴무 전면 시행 - 16세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 개정 -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 보장, 교원의 공직선거 출마허용(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관련 법률 개정) <p><input type="checkbox"/> 이행기간 임기내</p> <p><input type="checkbox"/> 재원조달방안 등 <input type="radio"/> 재원 불필요</p>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민중당		
정책순위: 6	제목 :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추진!	정책분야	교육
<p>□ 목 표</p> <p>○ 대학서열 해체</p> <p>- 입시에서의 격차가 불평등의 대표적 사례로 여겨지면서, 이를 위한 해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정시 확대를 내건 배경이기도 함. 학벌이 사회적·문화적 자본의 격차를 확대하는 기제가 되고 기득권의 지표 중 하나가 된 사회에서 ‘정시냐 수시냐’하는 입시제도 개편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음.</p> <p>○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대학 교육기회 부여</p> <p>□ 이행방법</p> <p>○ 국공립대학교 통합네트워크 구축</p> <p>- 서울대학교 폐지</p> <p>- 국공립 통합네트워크 교육과정을 이수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p> <p>- 정부 재정에서 나가는 대학지원금을 국공립통합네트워크 편입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함.</p> <p>○ 양질의 직업훈련 교육기관 육성 병행</p> <p>□ 이행기간</p> <p>○ 임기 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p>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민중당		
정책순위: 7	제목 : 미세먼지 대책	정책분야	환경
<div> <div>□ 목 표</div> <div> <div>○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자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 강화</div> <div>○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관리강화</div> </div> <div>□ 이행방법</div> <div> <div>○ 석탄발전소 완전 퇴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 봄철 석탄발전 가동 중단 -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및 조기폐쇄 - 석탄화력의 환경, 건강비용 반영한 에너지세제 및 전력시장 개편 -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div> <div>○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 확대, 대기배출부과금 오염자 부담원칙 실현,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량(TMS) 실시간 공개 - 예외허용 금지, 기존사업장에 대한 소급적용 </div> <div>○통학로 미세먼지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의무화 및 지원 확대 </div> </div> <div> <div>□ 이행기간</div> <div>○ 임기 내</div> </div> </div>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민중당		
정책순위: 8	제목 :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정책분야	여성
<p>□ 목 표</p> <p>○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상반기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85.9%(885명), 남성이 14.1%(145명), 연령별로는 20대가 22.2%(229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피해 유형은 전체 피해건수 1910건 가운데 유포 피해가 30.3%(578건), 불법촬영이 26.6%(509건)으로 사이버 성범죄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사이버 성범죄는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성별기반 젠더폭력임. <p>□ 이행방법</p> <p>○ 사이버 성범죄 처벌법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조 1항 개정 : 본인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불법유포시 처벌 - 제14조 3항 개정 :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처벌 -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자 처벌법 마련 : 불법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행위라도 유포 협박의 정황이 있는 경우 처벌 가능 -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p>□ 이행기간</p> <p>○ 임기 내</p>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민중당		
정책순위: 9	제목 :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권리보장	정책분야	보건복지
<div> <div>□ 목 표</div> <div> <div>○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div> <div>○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div> <div>○ 청각장애인의 언어 수어 초등학교 의무교육</div> <div>○ 장애인 이동권 보장</div> </div> </div> <div> <div>□ 이행방법</div> <div> <div>○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div> <div>-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장애’의 포괄적 정의 및 범주 확대</div> <div>○ 장애인 이동권 보장</div> <div>- 신규도입 시내, 광역, 마을버스 100% 저상버스 도입</div> <div>○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와 최저임금 도입</div> <div>-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민간 3.1%, 공공 3.4%에서 2019년과 동일하나 이를 5%로 상향조정</div> <div>-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7조)을 삭제</div> </div> </div> <div> <div>□ 이행기간</div> <div> <div>○ 임기내 입법, 제도 시행</div> <div>- 저상버스 도입(기존 차량 폐기 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div> </div> </div>			

선거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민중당		
정책순위: 10	제목 : 취준생을 위한 청년이직준비급여	정책분야	기타(청년)
<p>□ 목 표</p> <p>○ 청년들에게 이직 보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보험 개편으로 ‘청년이직급여’ 신설</p> <p>- 저임금에 미래를 찾기 어려운 직장일수록 청년들은 이직 외에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저소득 청년일수록 이직이 잦을 수밖에 없음. 그러나 많은 청년들에게 별도의 준비기간을 가질 여유 없는 이직이 악순환 되고 있는 상황임.</p> <p>- 실제로 첫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이후 재취업 일자리 임금수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대졸자의 경우 첫 직장이 대기업, 상용직인 경우와 중소기업, 임시직인 경우의 차이가 10년 후까지도 유지되는 등 경력 초기 기업 규모와 노동 형태가 향후 일자리의 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황임.</p> <p>- 이직을 해도 처음 들어간 낮은 일자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을 끊을 기회만이라도 가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p> <p>□ 이행방법</p> <p>○ 이직준비급여 중 청년층(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은 그 특성을 반영하여 횟수의 제한이 없는 ‘청년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함 (600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p> <p>○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 청년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일정 기간(개정안에서는 120일) 동안 고용보험료를 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필요에 따라 쓸 수 있음. 자신의 인생 계획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함.</p> <p>□ 이행기간</p> <p>○ 임기 내 시행</p> <p>□ 재원조달방안 등</p> <p>○ 고용보험료 자체 수입</p>			